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9호 | 2024년 5월 13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한주 | idp.theminjoo.kr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 (1안) 추경예산 방식 (2안) 법률 방식(MB정부 유가환급금 사례) -

채은동 연구위원

《 요약 》

■ 경제운용 실패

- 저성장 : 2023년 성장률 1.35%는 경제 70년사 중 6번째로 낮은 수치
민간경제 위축(성장기여도 0.9%p)에도 불구하고 정부 무대책 일관(성장기여도 0.4%p)
- 고물가 : 현 정부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 6% 상승. 급등한 10개 항목 모두 채소·과일

■ 재정운용 실패 : 저성장 → 세수결손 → 마이너스 재정수지 → 국가부채 증가

- 2년 연속 세수결손 : '23년 △56조 원(실적), '24.1분기 △8조 원*(1분기 기준 추정치)
* 전년대비 세입감소분 2.2조 원 + 전년대비 예산증가분(23.2조 원)의 1분기분 5.8조 원
- 마이너스 관리재정수지 : '22년 △117조 원(GDP대비 △5.4%), '23년 △87조 원(△3.9%)
- 상승한 국가채무 : '23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尹정부 이후 중앙채무 102조 원 증가
- 헌법 및 국가재정법 위반 가능성
 - 「국가재정법」 제59조 : 국가결산 4월 11일 제출 → '08년 이후 최초 법적기한(4월 10일) 위반
 - 「대한민국헌법」 제56조 : 지방재원 23조 원 임의삭감 → 예산 변경 시 추경편성 의무 위반
 - 「국가재정법」 제88조 : 국세감면을 법정한도(14.3%) 준수 권고 → 감면을 15.8%로 한도 위반

■ 대안 :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 근거 : ① 위기에 빠진 민생 ② 물가압력 하락 전망 ③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 미미*
* 민생지원금 13조 원 ⇒ 내수증진(성장률 기여도 0.2~0.4%p) ⇒ 3% 성장률 견인
- 방법 : (1안) 추경 방식 (2안) 법률 방식 :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MB정부 유가환급금 사례

▶ 키워드: 추가경정예산, 세수결손, 민생회복지원금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경제운용 실패

(1) 저성장

○ 경제성장률 2023년 1.4%, 2024년 2.2%(전망치)

- 2023년 1.4% : 1954년 통계 작성 이후 70년 동안 6번째로 낮은 수치(표 7 참조)
- 2024년 2.2% : 경제사 71년 동안 7번째 낮은 수치. 1분기 속보치 결과 상향조정 전망
 - 2024년 1분기(속보)의 경우, 대기업 수출 회복에 따라 높은 성장률(전년동기대비 3.4%) 시현

○ 민간경제 활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할 부재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민간경제가 위축되자 정부가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높였고, 2021년 민간경제가 회복되자 정부 성장 기여도를 줄여감
- 2022년 이후 정부역할 실종. 2023년 민간경제가 위축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할 지속 감소
 -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전년동기대비) : ('23.Q1) 1.0% (Q2) 0.3% (Q3) 0.2% (Q4) 0.0% ('24.Q1) 0.2%

<표 1> 주체별 성장률 연간 기여도 : 2020~2024.1분기

(단위: %p)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1분기
민간	-1.8	3.6	2.1	0.9	3.3
정부	1.1	0.7	0.5	0.4	0.2
경제성장률	-0.7	4.3	2.6	1.4	3.4

주: 2015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2024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수치
 자료 : 한국은행 ECOS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2) 고물가

○ 현 정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 6% 상승

- 월별 상승률 : ('23.11월) 3.3% (12월) 3.2% ('24.1월) 2.8% (2월) 3.1% (3월) 3.1% (4월) 2.9%
-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며, 물가지수 자체는 현 정부 기간 동안 6%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 : ('22.5월) 107.5 → ('24.4월) 114.0 <6.0% 상승>

○ 현 정부 동안 가장 많이 오른 10개 항목 모두 생활에 밀접한 과일, 채소

<표 2> 윤정부 기간 물가상승률 상위 10개 항목 : '22.5월~'24.4월

(단위: %, 2020=100)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품목	생강	굴	호박	사과	토마토	당근	부추	양파	배	오이
'22.5월	61.9	127.0	71.3	100.4	87.3	83.9	89.5	78.4	120.0	87.0
'24.4월	120.7	238.7	132.5	177.3	151.5	139.1	143.6	124.0	188.3	136.2
증가율	95.0%	87.9%	86.0%	76.6%	73.5%	65.9%	60.4%	58.2%	56.9%	56.5%

자료 : KOSIS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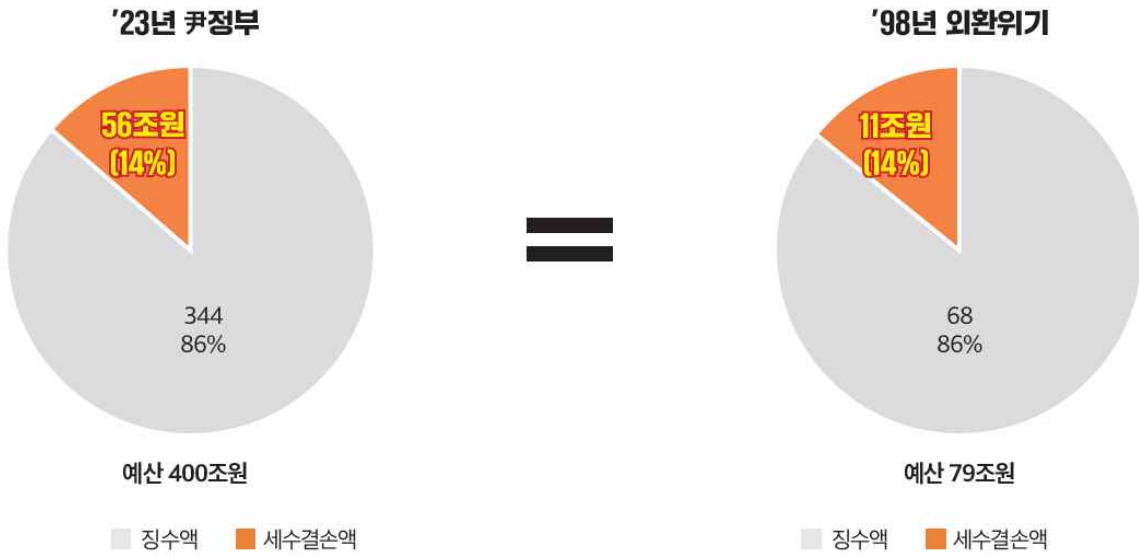
2. 재정운용 실패

(1) 2년 연속 세수결손 : 저성장·부자감세의 결과

○ 2023년 세수결손 : △56조 원(실적)

- 세목별(조 원) : 법인세 △24.6, 양도세 △12.2, 부가세 △9.4, 관세 △3.4, 종합소득 △3.3
- 1998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세수결손비율 14% 시현. 2023년은 예고된 위기를 무시한 결과

<그림 1> 2023년 세수결손 : 1998년 외환위기급 재정혼란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연도별 예산안,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1.31.)

○ 2024년 1분기 세수결손 : △8조 원(1분기 기준 추정치)

- 정부는 23조 원(6.7%)이 증가한 국세수입예산(367조 원)을 편성했으나, 2024년 1분기 국세 실적은 감세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2조 원 감소
 - '24.1분기 세수결손 : 전년대비 세입감소분 2.2조 원 + 예산증가분(23.2조 원)의 1분기분 5.8조 원
 - '22년 법인세율 인하→'23년 법인소득 적용→'24년 결산 시 법인세 납부하는 3~4월 효과 발생
- 3월 국세진도율(23.1%)은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25.3%)보다 나쁜 수치
- 국회예산정책처(2023.10)는 기재부보다 6조 원 낮은 수입 전망. 세수결손 가능성 이미 제기

<표 3> 국세결손 분해 : 2024년 1분기

(단위: 조 원)

	국세수입예산 증가분(1분기)			전년실적대비 감소분(B)	예산대비 세수결손 (-A+B)				
	'23실적 (A ₁)	'24예산 (A ₂)	증가분 (A ₂ -A ₁)						
				법인세 (B ₁)	소득세 (B ₂)	부가세 (B ₃)	기타세목 (B ₄)		
5.8	344.1	367.3	23.2	△2.2	△5.5	△0.7	3.7	0.3	△8.0

주: 국세수입예산 증가분 23.2조 원의 25%(1분기)만 반영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2023.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4.3월 국세수입 현황”(2024.4.30.)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정리

(2) 마이너스 관리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2년 연속 △3% 초과

- 관리재정수지 : '22년 △117조 원(GDP대비 △5.4%), '23년 △87조 원(GDP대비 △3.9%)
-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3% 관리)을 추진하면서, 2년 연속 재정준칙에 반하는 재정 운용

<표 4>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 2022~2023년

(단위: 조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3년 증감	
	결산	예산	결산	'22결산대비	'23예산대비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64.6 (△3.0%)	△13.1 (△0.6%)	△36.8 (△1.6%)	27.8 (1.3%p)	△23.7 (△1.1%p)
총수입	617.8	625.7	573.9	△43.9	△51.8
총지출	682.4	638.7	610.7	△71.7	△28.0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17.0 (△5.4)	△58.2 (△2.6)	△87.0 (△3.9)	30.0 (1.5%p)	△28.8 (△1.3%p)

주: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2024.4.11.)

(3) 상승한 국가채무비율

○ 국가채무 : 1,127조 원 <전년대비 +59.4조 원>

- 대부분 중앙정부채무 : 중앙정부채무 1,093조 원(97.0%), 지방정부채무 34조 원(3.0%)
 - 전년대비 채무증가분 : 중앙정부 59조 원, 지방정부 3천억 원
- 尹정부 22개월 동안 중앙정부채무 102조 원 증가. 동일기간 文정부 39조 원의 2.61배 규모

<표 5> 중앙정부채무 비교 : 文정부 vs. 尹정부

(단위: 조 원)

구분		文정부('17.5~'19.2)	尹정부('22.5~'24.2)	차이
취임 당해연도	5월(취임)	631	1,019	388
	8월	640	1,031	391
	12월	627	1,033	406
취임 차년도	4월	659	1,073	413
	8월	685	1,110	425
	12월	652	1,093	441
취임 2차년도	1월	661	1,103	443
	2월	670	1,120	451
취임 후 총 22개월간 중앙정부부채 증가분		39 (100%)	102 (261%)	63 (161%)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분석

○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50% 초과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2년) 49.4% → ('23년) 50.4% < 1%p 증가 >
 - 국가채무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중앙 48.9%p, 지방 1.5%p

(4) 헌법 및 국가재정법 위반 가능성

○ 「국가재정법」 제59조 : 국가결산 법적기한 위반

- 법률 : 국가결산보고서 4월 10일까지 의무제출
 -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 총선 직후 4월 11일 제출. ‘08년 이후 최초 법적기한(4월 10일) 위반
 - 4월 11일에 재정건전성 악화 수치(관리재정수지 △3.9%, 국가채무비율 50% 초과) 발표

○ 「대한민국헌법」 제56조 : 추경 없이 예산 임의삭감 위반

- 법률 : 예산 변경 시 추경편성 의무
 -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실제 : 2023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 23조 원 임의적으로 삭감

○ 「국가재정법」 제88조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위반

- 법률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2023년 14.3%(기재부), 2024년 14.6%(민주연 추계치)
 -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제 : 2023년 15.8%*(법률 위반), 16.6%***(법률 위반)
 - * 기재부 국세감면액(69.5조 원)을 바탕으로 국세수입액(344.1조 원) 등 반영하여 재추계
 - ** 기재부 국세감면액(77.1조 원)을 바탕으로 최근 국세수입 실적 반영하여 재추계

<표 6>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위반 : 2020~2024년

(단위: 조 원)

구분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추정	2024년 추정
국세감면액		52.9	57.0	63.5	69.5	77.1
기획재정부	국세감면율	14.8%	13.5%	13.0%	13.9%	16.3%
	법정한도	13.6%	14.3%	14.6%	14.3%	14.0%
	위반 여부	위반	-	-	-	위반
민주연 연구원 재추계	국세감면율	14.8%	13.5%	13.0%	15.8%	16.6%
	법정한도	13.6%	14.3%	14.6%	14.3%	14.6%
	위반 여부	위반	-	-	위반	위반

주: 민주연 재추계는 기재부 국세감면액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결산(2023년) 및 예산추계(2024년, 1~3월 실적 반영하고 4~12월은 정부 예상대로 징수 가정)를 반영하여 계산.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세감면액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202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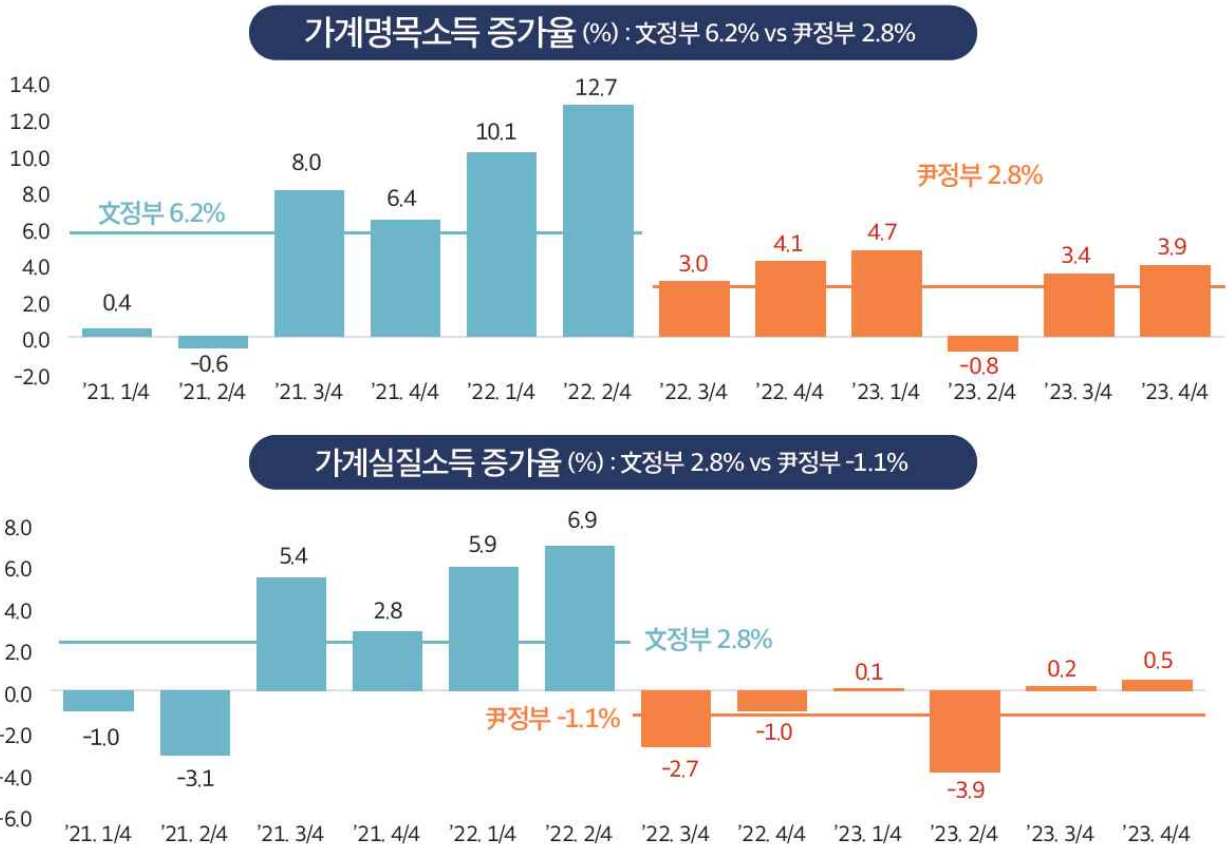
3. 민생추경 필요

(1) 추경근거①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하자

○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가계소득이 명목과 실질 모두 어려운 상황

- 현 정부 집권 직후인 2022년 3분기부터 가계소득 둔화 및 실질소득 마이너스 전환
- 2023년 4분기 기준 적자가구비율이 1분위, 2분위, 3분위, 5분위에서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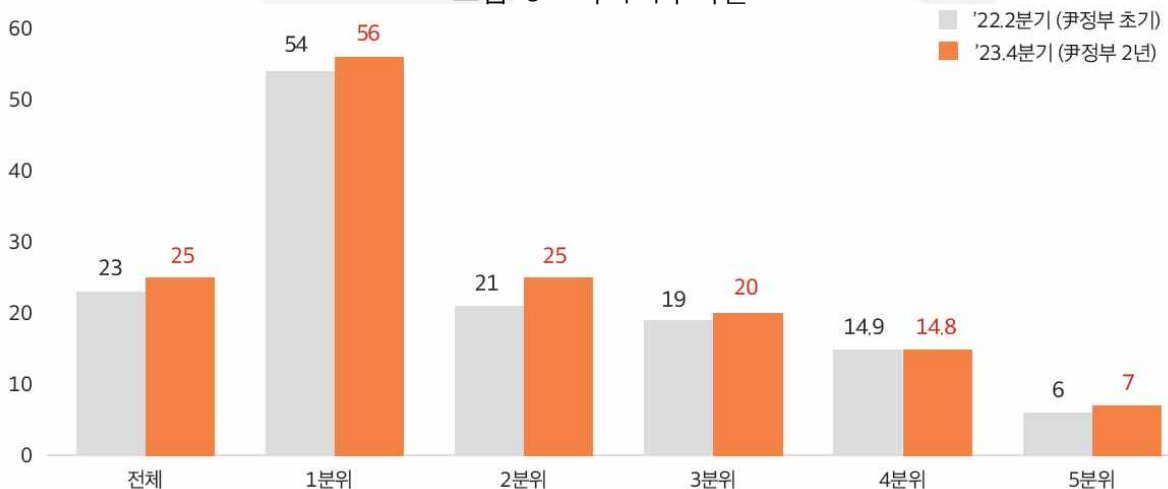
<그림 2> 가계소득 증가율 비교: 文정부 vs. 尹정부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인 이상, 전국 가구),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연구원 분석

<그림 3> 적자가구비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인 이상, 전국 가구)

(2) 추경근거㉓ 물가상승 압력 완화 가능성이 있다

○ OECD는 공급측 압력이 안정되는 등 향후 한국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가능성 전망

- OECD는 우리나라와 G20 물가상승률 하락 예상(OECD Economic Outlook)

• 우리나라 : ('24.2월 전망) '23년 3.6% → '24년 2.7% → '25년 2.0%

('24.5월 전망) '24년 2.7% → 2.6% <0.1%p 하락 예상>

• G20(특이치인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제외) : ('24.2월 전망) '23년 3.6% → '24년 2.6%, '25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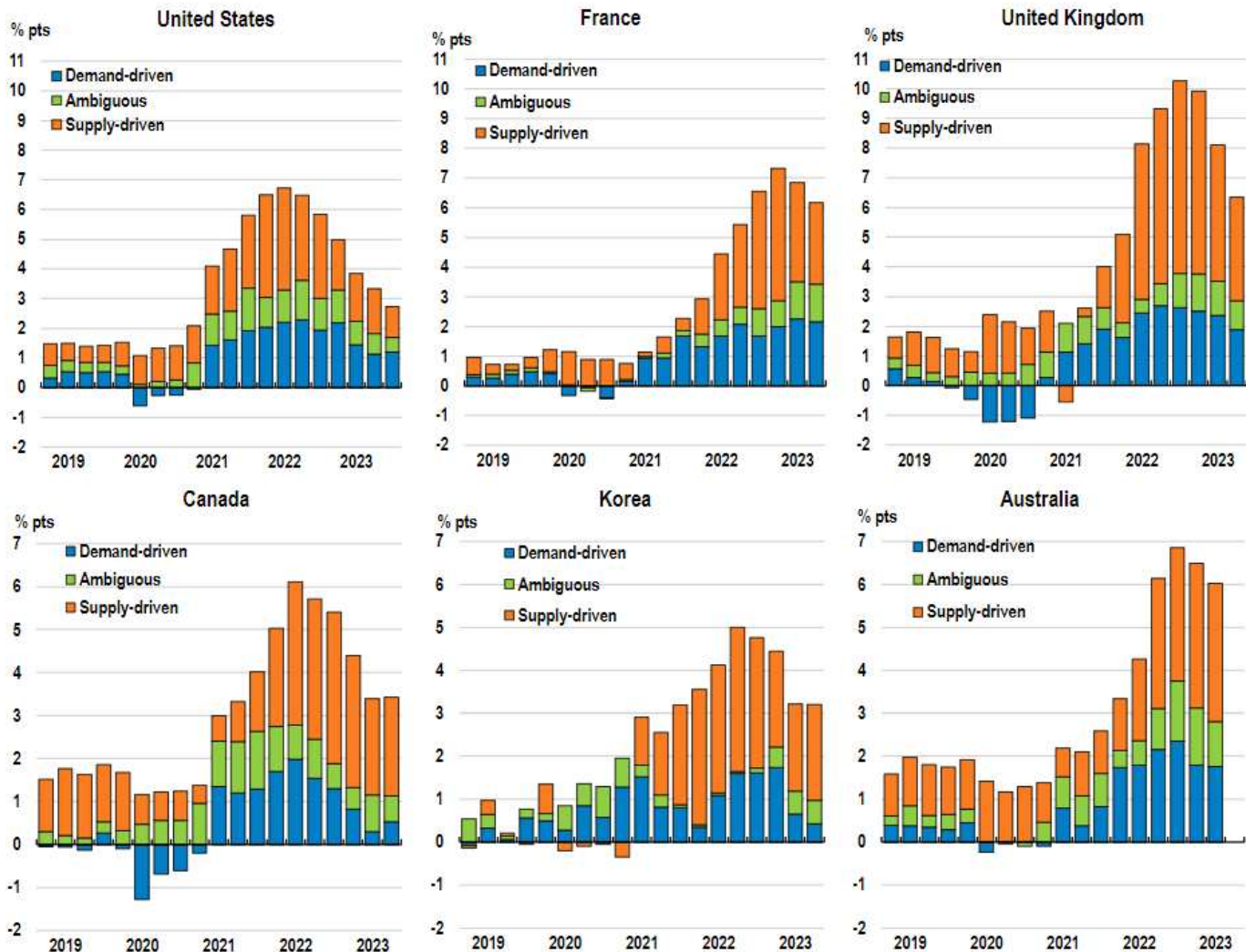
- OECD의 물가요인 분해 결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의 상당수는 공급측 압력이 강하고 수요측 압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3분기 우리나라 : 공급측 2.2%p, 수요측 0.4%p, 구분불가 0.5%p 등 총 3.1%p

• 2023년 3분기 수요측 압력 : 미국·호주는 1%p 상회, 프랑스·영국은 2%p 상회

<그림 4> 물가상승률 압력 요인 분해(전년동기대비) : OECD

(단위: %, %p)



주: 1. 미국은 2023년 4분기, 나머지 5개국은 2023년 3분기까지

2. 'Ambiguous(애매)'측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 : 미국 경제분석국, 프랑스 INSEE, 영국 통계국, 캐나다 통계청, 한국은행, 호주 통계국 자료를 이용하여 OECD 분석

(3) 추경근거③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미미하다

○ 2023~2024년 2년 연속 하위권 경제성장률

- 성장률 하위 1~5위 연도는 위기상황에서 발생. 2023~2024년은 특별한 위기라고 보기 어려움
- 2023년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낮은 성장률(2.2%) 예상 → 최근 성장률 상향 예상
- OECD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2024.5) : 2.2% → 2.6%

<표 7> 전망 시기별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하위순위	경제성장률	연도	성적표 (71년 경제사)	주요 원인
1	-5.1%	1998년	하위 1.4%	1997년 말 외환 위기 , IMF 구제금융
2	-1.6%	1980년	하위 2.8%	2차 석유 파동 , 민주화운동과 비상계엄
3	-0.7%	2020년	하위 4.2%	코로나19위기
4	0.6%	1956년	하위 5.6%	비상경계령 , 한-미 갈등
5	0.8%	2009년	하위 7.0%	글로벌 금융위기
6	1.4%	2023년	하위 8.5%	윤석열 정부
7	2.2% ^e	2024년	하위 9.9%	윤석열 정부

자료 : OECD Statistics,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정리

○ 활력을 회복한 민간경제를 정부가 끌어내리는 형국

- 2022년 4분기부터 민간경제가 둔화됐고, 정부 또한 2023년 상반기는 재정을 집중 투입
 - 현 정부의 2023년 총지출 진도율(1분기)은 **문재인정부 2022년과 유사** : ('22년) 29.8% ('23년) 29.2%
- 2023년 2분기 이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성장률 기여도(0.2~0.3%p)가 거의 사라짐
- 2024년 1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2%로 거의 없으며, 지난해처럼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위기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에 고집하는 경우 정부의 성장기여도 추가 하락 가능성

<표 8> 경제주체별 성장률 분기별 기여도 : 2022.Q3~2024.Q1

(단위: %p, 전년동기대비)

	2022.Q3	2022.Q4	2023.Q1	2023.Q2	2023.Q3	2023.Q4	2024.Q1
민간	2.9	0.5	-0.2	0.5	1.1	2.3	3.3
정부	0.2	0.8	1.0	0.3	0.2	0.0	0.2
성장률	3.2	1.4	0.9	0.9	1.4	2.2	3.4

주: 2015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자료 : 한국은행 ECOS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 정부가 민간의 성장 회복을 뒷받침하여 3% 성장률을 달성할 필요

-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 내수 회복 등 경제 회복세. 여전히 중소기업·자영업 어려움
 - 2024년 1분기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대기업 7.9%, 중소기업 -2.0%
- 정부의 총지출 예산 : ('23년) 639조 원 → ('24년) 657조 원 <전년대비 2.8% 증가>
 - 2024년도 세수결손이 반복될 경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근거로 정부지출 불용 가능성 매우 높음
- 3% 성장률 자체가 경제회복의 강력한 시그널 효과

(4)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 물가자극 없이 약 20조 원의 추경 가능¹⁾. 재정 여력도 가능

- ‘산출 갭*’ 기준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한국은 지속적 불황 상태. 물가자극 없이 2022년 수준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 20조 원의 추가 재정지출 필요

*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장기성장추세에서 얼마나 괴리됐는지 측정

- GDP 대비 국고채 이자상환액 규모가 1.2%로, 재정여력 충분
 - 국고채 이자상환액 예산액(GDP 대비) : '23년 24.8조 원(1.1%) → '24년 2.8조 원(1.2%)
 - 래리 서머스는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GDP 대비 국채이자상환 비율 2%를 제시
- 국가부채 규모 또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여력이 있음
 - GDP 대비 정부부채(2022년, D2) : 한국 54%, 독일 66%, 영국 102%, 스페인 112%, 미국 121%

○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 소비효과 ⇒ 3% 성장률 견인

-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p 발생
 -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하위계층의 소비효과가 크게 발생 추정

<표 9> 민생지원금의 소비효과

(단위: 조 원)

민생지원금	소비승수효과	소비증가효과	GDP 대비
14.0	30%	3.9	0.17%p
	50%	6.5	0.28%p
	70%	9.1	0.39%p

주: 소비승수효과는 2020년 5월 시행된 1차 재난지원금 소비효과 연구 참조
 자료 : 민주연구원

○ (1안) 예산 방식 :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

- 과거 사례 :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 규모 : 14조 2,357억 원 지급, 2,216만 가구
 - 방식 : 소득·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 기부 유도. 취약계층 현금지급
 - 지원방식 : 신용·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2%, 현금 12.9%, 지역사랑상품권 7.8%
- 1차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액의 30~70%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한계소비성향)
 - 김미루·오윤해 (2020) : 26.2~36.1%,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 이용
 - 이우진·강창희·우석진 (2022) : 2~3분기에 걸쳐 총 65.4~78.2%, 가계동향조사* 자료 이용
 중졸 78~84%, 고졸 63~101%, 전문대졸 121~147%, 대졸 83~88%
 - * 표본가구의 가계부를 통해 조사. 가구의 인적구성, 소득, 소비 내역 등 상세 분석 가능
 - 홍민기 (2020) : 72%, 가계동향조사 자료 이용

1) 나원준, "윤석열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 2024.5.7.

- 이승호·홍민기(2021)* : **83.6%**. 가구지출이 1분위 15.4%, 2분위 16.9%, 3분위 10.5% 등 증가
* 해당 수치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를 함께 분석
- ※ Johnson et al. (2006) : **66.6%**,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 효과
- Woo et al. (2021) : **69%**,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한카드 사용액 자료 이용

○ (2안) 법률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추경을 통한 편성이 어려운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1회성 지원 가능
- 과거 사례 : 2008년 유가환급금(1인당 6~24만 원 현금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2008.9.26.)
 -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가상승에 대응해 근로자 등 서민생활 지원
 - 규모 : 2조 6,520억 원, 1,435만명, 1인당 평균 18.5만 원
 - 방식 :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사업자 등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 * 근로자 : 3,000만원 이하 24만 원, ..., 3,400~3,600만 원 6만 원, 3,600만 원 초과 제외
 - 사업자 : 2,000만원 이하 24만 원, ..., 2,260~2,400만 원 6만 원, 2,400만 원 초과 제외

<< 유가환급금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34 >>

제100조의27(유가환급금)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기준소득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기준소득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절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

(이하 생략)

- **환급가능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방식 검토 가능**

- 유가환급금(舊,) 근로장려금(現)이 해당 방식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운용
- 조세지출 :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미포함 ⇒ 정부의 예산편성권(헌법)을 침해하지 않음
- 현금지급 : 조세지출제도이나 현금으로 환급 ⇒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 발생
- 소득세신고자는 25만원 지급 가능. 단, 非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 가능
- 2023년 국세수입 46조 원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1.7조 원 증가 ('22년 57.4조 원 → '23년 59.1조 원)